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021. 1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재검토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22.12.31까지)

- 투자포함형 : $[당기소득 \times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times 20\%$

- 투자제외형 : $[당기소득 \times 15\% - (임금증가 + 상생)] \times 20\%$

* 가중치 :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이월하여 차감 가능(이월기간 1년)

- (개정안) 기업소득 비중 조정

- 투자포함형 : $[당기소득 \times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times 20\%$

- 투자제외형 : 현행과 동일

* 가중치 : 현행과 동일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이월하여 차감 가능(이월기간 2년)

□ 문제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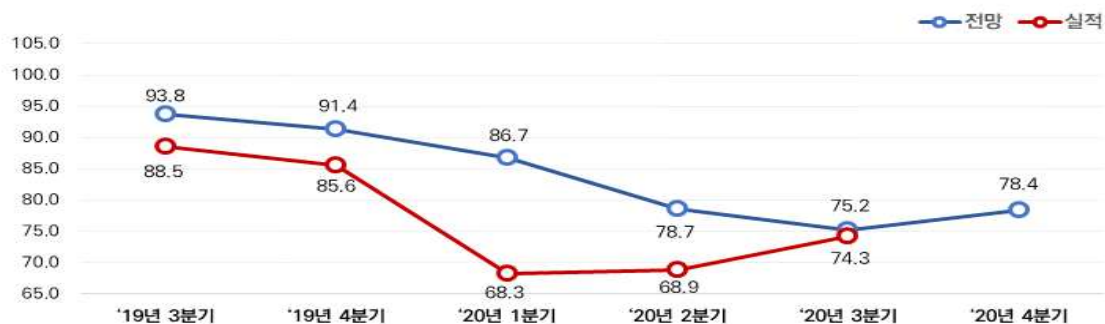
* 중견기업 주된 경영애로 '자금조달 곤란' 응답 비중 : ('15) 11.6% → ('16) 14.0% → ('17) 13.4% → ('18) 14.7% → ('19) 18.1% (각 연도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보금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해 오히려 초기 중견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 내부 유보자금 65.2% 시중은행 차입 23.5% 회사채 발행 2.2% 정부 정책자금 활용 2.0% 順(중견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법인세율 인상('17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17년)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
- 또한 '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의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여유자금 비축이 필수적인 상황
- 중견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경기전망 및 실적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 회복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영현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 경기실적 및 전망지수>



* 중견련, 2020년 4분기 경기전망조사

-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중견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여신한도가 축소되거나, 자금상환 압박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외부 신규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 유보금이 적은 중견기업의 경영난 심각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건의내용

- (1안) 코로나 위기극복시까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한시유예
- (2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포함분 과세 부담 완화
 - (개정안) $[\text{당기소득} \times 7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지출금})] \times 20\%*$
 \Rightarrow (건의) $[\text{당기소득} \times \underline{65\%}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지출금})] \times \underline{10\%*}$
 - * 舊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적용

2.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직무발명 보상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율(당기분 방식) : 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최대 2%

- (개정안) R&D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 범위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추가

*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

□ 문제점

- 중견기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항공·드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 많아 한국형 뉴딜을 통해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필수 기업군임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18.2월)

- 중견기업은 투자여력 부족으로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표1),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비중* 또한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 ('17년)42.7% → ('18년)50.5% → ('19년)54.4%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표1) 중견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단위:%,억원)>

구분	전체	R&D투자		설비투자	
	투자금액	투자금액	구성비	투자금액	구성비
2019년 실적	286,499	78,224	27.3	208,275	72.7
2020년 계획	263,667	78,435	29.7	185,232	70.3
2021년 계획	251,779	79,204	31.5	172,575	68.5

*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그러나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비중*이 81.0%인 것에 비해,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2.4%로 격차가 크고 특히 매출 1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29.9%에 불과하여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술력 격차가 큼

* 중견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 100억원 미만 29.9%, 100억원~500억원 미만 43.7%, 500억원~1,000억원 미만 58.1%, 1,000억원~2,000억원 미만 69.1%, 2,000억원~3,000억원 미만 74.6%, 3,000억원~5,000억원 미만 78.0%, 5,000억원~1조원 미만 78.6%, 1조원 이상 85.4%(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초기 중견기업의 특허 창출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각각 25%, 8~15%로 차이가 있어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지원됨

□ 전의내용

- 중견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개정안)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
(건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3.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 인력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21.12.31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22.12.31까지)(조특법 제18조)

- (개정안) 외국인 기술자의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취업기관은 확대

- (인력요건) (현행) 연구원 → (개정안)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취업기관)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개정안)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문제점

- 중견기업의 33.4%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의사가 있으나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의 부재, 낮은 임금·복지 수준, 회사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연구개발 인력 채용 애로사유 : 직무능력·자격을 갖춘 지원자 부재(69.9%), 회사의 임금·복지 수준과 구직자 기대수준의 불일치(53.8%), 지방소재(36.6%), 회사의 낮은 인지도(21.5%), 이직으로 인한 인력유출(19.4%) 順(중견련, 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요조사, 2019)

- 중견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이 많고, 수출기업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국내 인력과 마찬가지로 채용이 용이치 않음
- 외국인력 채용 시 임금수준·회사 인지도 등 대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은 경력보다 성장가능성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강화된 경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 완화 필요

사례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 중견기업 A사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연구원 7명을 채용 중이나 외국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인력 요건이 강화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연구원은 0명으로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높아 대기업과의 인력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해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가능성이 보이는 직원을 채용하여 역량을 키웠는데, 소득세 감면 지원이 사라지면 연구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인력유출이 발생할까 우려됨 	

□ 전의내용

-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 요건 완화
- (개정안)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박사 학위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 (건의)(1안)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2안)①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경력 2년 이상
 - ② 박사 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경력요건 없음

4. 상장주식 시가 산정시 할증 적용 재검토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상장법인이 주식을 시가와 다른 대가로 장내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이 때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
-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①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②장외거래하는 경우 시가 ⇒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
 - ①, ②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시가에 20% 할증 적용

* 대량매매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장내거래는 가격에 따름

□ 문제점

- 법인-개인간 상장주식 양도거래는 매수자가 주식 가치에 대해 정당한 급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장내 대량매매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다도 통상적인 시가와 차액만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체 주식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과도한 조치임
- 또한, 상증법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함에 있어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위험도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할증을 적용하여 할증률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일률적으로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율도 최고 50%로 OECD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거래는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상증법을 준용하여 일률적인 할증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내용

- 상장주식 시가 산정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한 할증 규정 삭제